

박형준 / 4월 / 기출GS / 3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17297	17	11	18	12	58	1	3.85%	7	26
517156	17	10.5	17	10	54.5	2	7.69%	5	
517310	16.5	11	16.5	9	53	3	11.54%	4	
517197	15.5	9.5	15.5	11.5	52	4	15.38%	4	
517234	13.5	9.5	17	11.5	51.5	5	19.23%	5	
517718	15	10	17.5	9	51.5	5	19.23%	4	
519124	16	10.5	18	7	51.5	5	19.23%	5	
517145	15	10	17	8.5	50.5	8	30.77%	6	
517346	16	9.5	15.5	9	50	9	34.62%	4	
518218	16	11	17	6	50	9	34.62%	4	
519343	16	10.5	16.5	7	50	9	34.62%	5	
517200	16.5	9	16.5	7.5	49.5	12	46.15%	4	
517546	15	9	17	8.5	49.5	12	46.15%	4	
518073	15.5	9.5	16.5	8	49.5	12	46.15%	5	
519433	14.5	10.5	13.5	11	49.5	12	46.15%	4	
517168	13	10.5	15.5	10	49	16	61.54%	4	
517425	16	7.5	16.5	9	49	16	61.54%	6	
514504	14.5	11	17	6	48.5	18	69.23%	5	
518044	15.5	10	15	8	48.5	18	69.23%	4	
515018	15.5	11	14.5	7	48	20	76.92%	5	
517303	13	10.5	16.5	7.5	47.5	21	80.77%	5	
518954	16	10.5	15	6	47.5	21	80.77%	5	
518198	13	10.5	16.5	6.5	46.5	23	88.46%	4	
518227	15	10.5	15.5	3.5	44.5	24	92.31%	4	
519409	15	7.5	16	4.5	43	25	96.15%	5	
517215	15	10	14.5	1.5	41	26	100.00%	4	

<p>박형준/4월/기출GS/3회/1번</p>	<p>채점자</p>
	<p>조현준</p>
<p>1. 전반적인 총평</p> <p>전반적으로 판례형 문제였습니다.</p> <p>어렵지 않은 판례들이었고 중요한 판례들이었으므로 대부분의 답안이 주된 판례는 적당히 잘 적어주었습니다.</p> <p>다만 쉬운 논점이기에 판례를 현출도 높게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 논리적으로 잘 쌓아서 사안 포섭까지 잘 가져가야 남들에 뒤쳐지지 않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소설문 1의 경우 답안 형식이 애매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을의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고 판례랑 사안포섭 잘 해주면 됩니다.</p> <p>소설문 2의 경우 쉬운 판례였고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전합 판례의 경우 종래 판례와 바뀐 태도까지 적어주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역시 쉬운 판례이고 중요한 판례이기에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p> <p>다만 진보성의 경우 종래판례와 전합판례 잘 적어주고 바뀐 판례의 태도 적어주는 경우 검토도 간단히 적고 사안의 해결에서 잘 풀어나가면 좋은 인상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또한 전합판례 논거를 위해 선결적 논점으로 권확의 의의 취지 및 목적 관련된 판례까지 앞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판례 잘 쌓아서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3) 설문 3

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들 잘 적어줬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선결적 논점으로 심취소 의의 및 취지 적어주고 심결전치주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예측 불가능 손해 없다는 내용까지 현출도 있게 잘 적어주신 답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3. 소결

이러한 판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각적 조치를 통해서 점수를 끌어낼 수 없고 판례 및 사안 포섭 이외에 적어줄게 많지 않아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래 판례와 다른 전합 판례가 있는 경우 종래의 태도와 전합 판례 적어주고 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한 검토 잘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판례부터 사안 포섭까지 논리적으로 잘 끌어와 주고 판례의 내용을 사안포섭에 잘 녹여내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4월/기출GS/3회/2번	채점자
	조현준
<p>1. 전반적인 총평</p> <p>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게 잘 적어주었습니다. 다만 완성도 있는 깔끔한 답안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간접침해 물어보는 문제였고 간접침해의 전용품 관련하여 기본적인 일반론 및 판례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안 포섭까지 풍부하게 대부분 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p> <p>다만 우선 문제에서 을의 항변 내용과 관련된 부분 캐치하여 그에 관련된 판례 적어준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p> <p>문제에서 트리거가 주어진 경우 맞는 판례 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로만 나타난다.’ 고 주어졌고 이에 맞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캐치 못한다면 좋은 점수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p> <p>전용품에서 부가 관련된 판례 적어준 분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M의 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에서 트리거로 주어진 부분은 아니었기에 적당히 짧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p>또한 간접침해 이유로 권확 관련 논점 적어준 분도 꽤 있었습니다만 역시 문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적당히 짧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p>기본적인 판례와 문제에서 트리거에 집중하여 판례 잘 적어주고 판례 관련내용 사안 포섭에 잘 녹여내어 풍부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은 답안이라 생각합니다.</p>	

(2) 설문 2

중요한 판례기에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문제에서 단순히 침해라고만 적어놔기에 간접침해여부까지 검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소결

판례를 그저 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왜 그런 판례가 나왔는지에 대해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판례집을 사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박형준/4월/기출GS/3회/3번	채점자
	조현준
<p>1. 전반적인 총평</p> <p>전반적으로 조문 및 판례에 대한 문제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많은 답안이 적혀야 할 판례 적당히 잘 적혀 있었습니다.</p> <p>문제가 이렇게 점수가 세세히 쪼개져 있는 경우 분량조절이 필요하고 또한 문제별로 적어줘야 할 판례 빠트리지 않고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공유 관련된 어려운 판례 아니었습니다. 판례에서 특허의 공유관계를 민법상 공유로 보는 논거들 여러 개 잘 나열하여 판례 현출도 있게 적어주면 됩니다.</p> <p>(2) 설문 2</p> <p>소설문 1의 경우 역시 판례에서 주어진 논거 잘 외워서 빠트리지 않고 적어주셨어야 합니다. 판례가 길어서인지 암기가 부족한 분들이 꽤나 보였습니다. 판례의 논거 중 하나로 특허법 99조 2항, 4항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적 논점으로 특허법 99조 의의 및 취지 적어주셨어야 합니다.</p> <p>소설문 2의 경우 적당히 현금 분할 가부에 대한 판례, 대금 분할 가부에 대한 판례 잘 적어주고 사안의 해결 잘 적어주셨으면 됩니다.</p> <p>(3) 설문 3</p> <p>소설문 1의 경우 조문과 사안의 해결 적당히 잘 적어주면 되고 틀린 분 없었습니다.</p> <p>소설문 2의 경우 중요한 판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적당히 적어주셨으나 판례 암기가 부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p>	

이러한 판례형 문제의 경우 판례와 선결적 논점 한두 개 이외에 딱히 적어줄 것이 없으므로 판례 암기가 고득점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넘버링 활용해서 판례의 논거들 잘 적어줘야 점수 충분히 들어갑니다. 또한 학설 간단히 검토해주면 좋고 사안의 해결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아직 4월 이므로 판례 현출도 낮은 부분 이해합니다. 7월까지 판례 열심히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3. 소결

이렇게 문제가 점수가 세세히 쪼개져 있고 거기다 판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딱히 다각적 조치 등을 해줄게 없기 때문에 고득점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적을게 많지 않아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례를 얼마나 키워드별로 꼼꼼히 외웠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길기 때문에 키워드 별로 논거 놓치지 않고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박형준/4월/기출GS/3회/4번</p>	<p>채점자</p>
	<p>조현준</p>
<p>1. 전반적인 총평</p> <p>앞 문제들이 크게 어려운 문제나 다각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없었고, 또한 판례들이 지엽적인 부분 없이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었기에 문제 4번까지 시간 분배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p> <p>다만 마지막 문제가 조치를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잘 안 외우는 판례들이 몇 개 있어서인지 잘 쓴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소설문 1의 경우 조문 33조 적어주고 승계인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p> <p>문제에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놓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부터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p> <p>소설문 2의 경우 판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잘 안 외우는 판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민사법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몇 회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예 민사법상 지식으로 풀어야하는 지엽적인 논점이 기출된 적이 있으므로 ‘변리사’ 수험생으로서 최대한 아는 지식 동원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을이 ‘채권자’ 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으므로 키워드 잘 캐치해주시길 바랍니다.</p> <p>(2) 설문 2</p> <p>문제에서 ‘단순히 알고 있는’ 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으므로 이중 양도 적극 가담 판례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 판례 잘 적고 사안의 해결 적어주셨으면 됩니다.</p>	

(3) 설문 3

이제는 익숙한 조치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문 1과 2 잘 풀어주셨으면 설문 3에서 가능한 조치 생각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까지 시간 분배 잘 하셔서 설문 3에서 다각적으로 가능한 조치 다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 들어갑니다.

3. 소결

일반적으로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4번 문제에서 좀 쉽게 나와 시간 분배에 어느 정도 성공하도록 기출 됩니다만 이번 3회처럼 마지막 4번 문제에서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36/24/36/24 잘 지키셔서 시간분배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GS의 목적인 난해한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에 따른 시간 분배 충분히 잘 연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주차 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2주도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1]

I-1. 서문 (1)-1)

1. 당면무효 관련 취사시

무효심판 절차 이외에서 특허의 당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권리변위 부정 취사시

특허에 변경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권리변위가 부정된다고
하나, 진정성 부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권리실흔 항변 취사시

특허가 무효사유 있을 경우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무효심판 행정 절차로 고려한 권리에 가하여 항변하지
청구. 동해배상청구는 ~~권리실흔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Z 항변 성격

① 당면무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허 진정성 부정 시
에도 권리변위 부정 항변 불가하다. ③ 진정성 부정 시 권리
실흔 항변은 가능하다. ④ 따라서, Z 항변은 권리실흔 항변이다.

I-2. 서문 (1)-2)

1. 의견

특정 Z 항변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친제(공동 발명)
이 특허발명 진정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허청과 권리실흔에 관하여 1984
대답이 있다.

2. 동태 취사예

진보성 ~~상대~~ 증명되어도 권리범위가 부정확하다고 하다가
권리범용 항변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3. 전항 취사예

① 특허가 무효로 된 것이 영행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행사도 권리범용이고. ② 침해소송 법원으로서도 ~~고소~~
권리범용 항변이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살피기 위한 전제
로서 특허 진보성을 신리 판단할 수 있다.

4. 비판

특허청과의 권한 분배. 진보성 판단이 고소의 판단이
요구되는 점에 관한 비판이 있었다.

5. 검토

특허의 대체적 무효를 바가지 앓는 자에게도 무효선판을 청구
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을 신리 판단
하여 권리범용 항변 허용하는 전항 취사예를 타당하다.

6. 사항 3의 권리범용 항변 양분 판단의 전제

① 법원은 특허법명 진보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② 이에
근거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차

II. 설문(2)

1. 전제 - 혁신의 이익

침해소송 계속 중에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혁신성판
단 요건 기능을 갖는다. 혁신의 이익이 있다.



2. 신규성 부정되는 경우

(1) 권리범위 부정 여부 제1항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출원 당시 공지공용인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든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사안

① X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X 발명의 권리범위는 부정할 수 있고, ② 심판원은 가각심결하여야 한다.

3.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

강령이 많기
정성

(1) 권리범위 부정 여부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도 권리범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가부 제1항

1) 특허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 목적 달성

① 특허는 일한 등록이 되면 무효심결에서 무효로 확정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강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불 특허발명 조목이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분쟁을 조목리 공개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다. ③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진보성을 심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자료



권한 범위
다만 심판관 결정

2) 특허법상 심판조 및 무효심판 기능 약화 문제

① 특허법에서는 특허 무효 사유 있는 경우, 무효심판 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② 권리행위 중인 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를 진정하게 신리하는 것은 무효심판 절차의 기능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③ 따라서, 권리 행위의 부정에 관한 변론 특허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 있다.

(가) 권리 효력 사인

공정행위의 관계상, 특허행위의 진정성을 신리. 파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나) 심판원 조치

① 따라서, 심판원은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하여 신리할 수 있고 ② 변론을 행하여야 한다.

재판부에서.

5.8

II. 심문(3)

1. 문제점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공격방어방법을 선택 청구항등에서 제출할 수 없는지. 선택지항등의 신리 범위에 관하여 문제된다.

2. 학설

(1) 제한설

제한설로, 선택지항등은 권리항등이고, 선택지항등의 신

심판에서 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심판제12조에 이
러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무제한성

심판제12조도 소용물, 소용물, 소용물, 심판에서 정권권자
가 정권권자, 소용에서 마찰까지 심판에서 제
정하지 않았던 사항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취지

① 심판제12조의 소용물이 심판의 위법성 일반성을 근거
로 무제한성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적자권 범
용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한다.

② 심판에서 정권권자 하지 않았던 사항을 심판제12조에
하더라도 심판의 일반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의 이익이나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
를 가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4. 검토

① 심판제12조의 소용물, 심판, 소용 정제, 가설심판
제도를 고려할 때 무제한성을 원칙으로 하되.

② 이견 제출 통지는 강행규정인 전, 심판제12조에서
출원서류, 정정청구서 등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리범위는 일부 제한하는 취지의 타당성을
타당하다

5. 사안

- ① 2층 집판절차에서 심리·판단된 위법사유에 한하지 않고
 ② 심리를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판치222등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다. ③ 법원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문제 2]

I. 선택(1)

1. 간접침해anyi. 취지·法 제127조

특허는 무제재산권으로 침해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접침해 제1조
 이 높은 정도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물건발명의 경우·法 제127조

①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임의로 실시해야 한다.

② 공공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특허물건의 "생산"에 이용되는 물건 - 공공성

(1) 생산의 의미 제127조

① 간접침해 제2조는 구성 일부를 드러한 물건을 사용하면
 그러므로 구성 전부를 갖춘 물건을 실시한 개연성이 큰 경우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 권리가 무효하게 취급
 되지 않는 것이기 하여 ② 구성요소 일부를 드러한
 물건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갖춘 물건을 만들어
 이를 모두 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용침해 관련 제191

특허발명인 특정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만 아니라 이에 다른 부품이 결합하여 다른 효과를 나타내거나 기능침해 성립에 자량이 있다

4. 특허권인 생산 "예만" 사용하는 물건 - 전용성

(1) 전용성 판가기준 제191

① 물건의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경제자·상업자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사용가능성. 일시적인 사용가능성만으로는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 구매자 사용 제191

특정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허발명인 구성이 모두 안배된다면, 특허발명인 생산 예만 사용하는 물건을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5. 사안

(1) 공용성

① $A+M+C$ 에 반조체 제2항체가 이르는 사용례에 $A+M+b+C$ 로 나타나고, ② $A+M+b+C$ 는 $A+b+C$ 를 그대로 포함하고 M 을 부가한 것으로 $A+b+C$ 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b 는 B 로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크므로 B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④ 따라서 $A+M+C$ 는 $A+B+C$

를 이용하여 $A+M+b+C$ 의 생산에 ~~이~~ 사용되는 물건으로
공용성이 충족된다.

(2) 전용성

① 반조제 제2항체가 $A+M+C$ 를 구입하여 이용할 때.

$A+M+b+C$ 만 나타난다. ② ~~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A+M+C$ 발견할 수 있는 여하에 내지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

만으로도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실제 시장에서는 기존

공정으로만 사용되는 바, 사회통념상 승인되고 존용되는

경제적인 절용적인 용도는 $A+M+b+C$ 의 생산 뿐이다. ④

따라서 전용성이 충족된다.

(3) 신규

공용성, 전용성이 충족되는 바, 조의 연마용 패드는 ~~이~~ 특허물건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다.

I. 설문 (2)

신용(1) ~~발명(1)은 아니!~~ 8.5

1. 신규

특정 국내에서 한계품이 아닌 반제품을 생산한 바.

구성요소의 한배 원천상 침해가 아니다. 다만, 사안에서 그

예외는 인정하여 국내 생산 관하여 침해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2. 반제품 정합침해 여부

(1) 반제품 주조 제외

① 특허 독자의 일차적 특허권자의 행위를 등극된 국가 내

미세한 위치나 ③) 국내에서 주권 주장은 갖지 않는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주권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 공정이
 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그러한 가공 공정이 우리 사회하거나
 간헐하여 그 반제품의 생산만으로 특허법상의 유효성으로
 결정한 알제르사의 통하는 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법으로 생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에 부합한다.

(2) 사안

제 3자 丁이 제 33에서 반제품 생산한 바, 이점이 충족한다.

① 반제품이 주권 주장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점이 성립하고
 이) 그 결함이 우리 사회하거나 간헐하면 이) 이점이 성립
 하므로, 이 경우 국내 생산 간주되어 특허의 직접침해
 해당한다.

3. 간접침해 여부

반제품에 사용된 바다는 사정이 있어,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5

이점
아함..

[문제 3]

I. 설문(1)

1. 문제점

특허 공시의 성질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2. 해결

18

① 특허법 표현은 근거로 한 공유성 ② 합유나 유사한 성격이 있어 합유성
이 있다

3. 제19조

① 제9조 제 99조 2항. 4항 범위 내에서는 합유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
나 여는 무체재산권 특수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특허권 공유자들이 ~~특허공유자~~ 공유 특허에
대하여 조합관계로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③
특허법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고 하여. 원칙적 공유성이 판상이다.

4. 검토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
적으로 공유 관계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II-1. 설문 (2)-1)

1. 제9조 제 99조 2항. 4항 의미 취지

① 타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이나 기술력 등에 의해
타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공유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 한다. (제19조)

2. 공유물 분할청구 인정 여부 판례 - 적극

특허권 공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민법 제 99조 2항, 4항의 반의~~
~~에 반하지 않고, 또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를 금지~~
~~하고 있는 특허법상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공유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 인정된다고 한다.

3.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판례

(1) 공유의 특허공유 성질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 공유에는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원칙적 공유성이다.

(2)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 규정 적용 여부

특허권 공유에서 분할 청구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규정
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하는 특허법상 규정
도 없으므로, 따라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가) 결론

특허권 공유를 원칙적으로 공유로 보는 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 규정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II-2. 설문 (2)-2).

1. 현물분할 허용 여부 [제19]

특허권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게 되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를 발생시키는 바, 그러한 방식이 현물분할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대금분할 가부 [제19]

현물분할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바, 경우에 따라 다른 대금분할로 허용된다. 경우에 따라 다른 대금분할인 경우, 그 청구 전에 특허법령을 선택하고 있던 출원자에게는 변경특허권이 인정된다. (법 제122조).

3. 결론.

① 특허권이 현물분할로 중복 특허를 발생시키는 바, 특허권이 실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경우에 따라 다른 대금분할로 가능하다. ③ 현물분할로 가족배상에 의한 현물분할도 중복 특허 문제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III-1. 설문 (3)-1).

1 무효심판 피청구의 자격

(1) 공작 공유필수적 공중심판 피청구인 - 법 제139조 2호

공유인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심판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28

丁이 공유 특허권자 甲. 乙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甲. 乙을 모두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속까지 권리범위확장인입판 청구인 적격

(1) ~~요필수적~~ 공중상관 청구인 - 법 제 139조 3항

공유인 특허권자가 입판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안

특허권을 공유하는 甲. 乙이 입판 청구한 바, 甲. 乙이 함께
입판 청구하여야 한다.

III-2. 선행 (31-2)

1. 각 당사자의 지위

甲. 乙은 각각 선행의 당사자이다.

2. 문제점

특허법은 입판 청구에 관하여도 ~~요필수적~~ 공중상관 청구 규정
(법 제 139조 3항)을 두고 있으나, 선행제외소송에 관
하여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공유 특허권자가
제기할 소송이 ~~요필수적~~ 공중상관인지 문제된다.

3. 해결

① ~~요필수적~~ 공중상관과 ② ~~요필수적~~ 공중상관이 있다

4. 제 191

(1) 문제

상표법 관련 사건에서, 특허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 유지를 방해하는 불리한 입장이 있을 때, 공유자를
 1인으로 그 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의
 입장이다.

(2) 논거

① 공유자 중 1인이 승소하더라도 심판청구소송에 선행
 절차가 재개되고, 패소하더라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는 바, 합일확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② 공유자
 중 1인이 소 제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불리한 심판
 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h. 결론

보존행위는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원법 제 265조
 단서), 공동소송 강제하지 않으므로 합일확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6. 사안

해당 심판청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甲. 乙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해도 적법하고, 함께 제기해도 적법하다. 즉
 단독으로 원고정부를 가진다.

(제1항) 끝이요!

[문제 4]

I-1. 설문 (11-1).

1. 출원인 자격

① 정당한 권리자 반증 위하여 발명자 또는 승계인만이 출원인 자격이 인정되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특 제 33조 1항 본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 특 제 34조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이전 가능하다.

3. 권리 귀속 주체 판단

(1) 甲

甲이 X 발명을 완성한 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 A

甲은 강제징행 변할 목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양도한 것이나,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민법 제 104조). ㄱ

4. A 특허 유예

A 특허는 특 제 33조 1항 본문을 위반하므로 특허는 하자있다.

I-2. 설문 (11-2).

1. 재권자 대위권 행사 - 민법 제 404조

① Z를 甲에게 피보전채권이 있고 ② 甲은 A에게

이전등록청구권이 있고, ③ 범주의 필요성 및 ④ 甲이 권리 행사한 바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A특허를 甲에게 귀속시킨 후, 이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 채권자 취환권 행사 (민법 제406조)

甲이 A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행위는 강제집행 전항의 목적인 바, 사해행위는 아니므로 채권자 취환권 행사 후 이에 대해 집행한다.

3. 특허법상 조치 불가

乙은 특허권자 등이 아니어서 특허법상 조치 불가하다.

II. 선택(2)

1. 이중양도 문제

(1) 원칙

사적자치 원칙 상, 유효하다.

(2) 예외

이중양도를 잘 알면서 이에 적극가담한 것이라면 반차폐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한다.

2. 출원 전 승계 - 법 제382조

승계만으로 권리 발생하며 출원은 대항요건이다.

3. 甲 특허 유무

(1) 원칙

승계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있으므로, 특허는 유효하다.

(2) 예시

관공리 안 사원 내의 작곡가였던 경우, 양쪽은 무효이고, 특허도 무효이다.

III. 실용(3).

1. X발명 관련

(1) 하자

X발명은 개별 등록이어서 하자가 없다.

(2) 권리

① 특허는 D에게 영의변명 요구할 수 있다. ② 양쪽에는 있는 경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2. Y발명 관련

(1) 하자

특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D의 특허권도 실정등록요
구 제 3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권리

1) 이전등록청구 - 특 제 79조 제 2

특은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이전등록청구 가능하다.

2) 무효심판 청구

공공영익에 중하게 해를 끼친다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이든, 정당한 자격이 있다. (특 제 133조 제 1항)

3) 양쪽을 반한청구

양쪽을 모두 반한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741조)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재판이전

이리까지도  **윌비스** 변리사학원 1544-3383 patent.willbes.net **3.5** 라이팅입니다!

[문제-1]

I 선택(1)

1 선택(1) - 피고 2 항변 성격

(1) 당연무효 항변(1주)

- ① 행정처분의 공행효상 부당사유 없는 경우 무효성을 확립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하다 (4주) ② 진보성 부당 주장하며 당연무효 항변은
불가하다

(2) 권리항위 부당 항변(2주)

- ① 신생성위헌의 경우 권리항위 부당하나, 진보성 부당의 정황까지
한정해야 하는 것을 아님 (4주) ② 진보성 부당 주장으로 권리
항위 부당하다 옳다

(3) 권리남용 항변 (적극)

1) 4주

공익, 특허법 목적, 당사자행위, 실질적 이익을 논거로 부당사유가
형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기한 진보항변을
허치난용이다

2) 2주

2주 진보성 부당 주장하며 권리남용항변 가능하다

(4) 사유기능항변 (적극)

- ① 특허청에서 개비하는 실시예행위 공시기술과 동일 또는 2주
부터 통상적 식수 얻는 경우 특허법행위 개비한 필요로 없이
권리항위에 속하지 않는다 (4주) ② 2주 X 포섭한 상황



제2판에하느바 . 자기실신 X가 공리기술로부터 용이하다고
주장하여 2판에서항변 가능하다. 문헌공개의 정무를 위반하
리라

2 소의용 2)

(1) 2의 항변

권리낭용항변 . 리용식시항변 가능하다

(2) 권리낭용 항변에서 권리판단 가부 (적극)

1) 사예

장사가 권리낭용 항변을 하는 경우. 침해당 법원을
그 권리가 갖는 권리당 위반여부 권리판단 가능하다.

2) 사안

침해당 법원을 2의 권리낭용항변이 원하던 항변권기
판단하여 권리당 권리판단 가능하다

(3) 아예 기하 기각 가부 (적극)

침해당기, 손해배상 청구하는 리체가 권리낭용이라면
2의 권리낭용 항변 받아들여 기각판결 가능하다

II 소의용 2)

1 소의용 권리낭용 소의용 항변 의의/취지 (135③)

불법배상 또는 손해청구 위해 특허권이 권리낭용 속부에 대해
미리 공적 착안 판단 (숙의)는 계로이다.

2 신기술·진보성 부정이유로 권리범위 부정가복

(1) 사례

신기술 위반이유로 권리범위 부정리나. 이와 같은 법리는
권해성 위반의 경우까지 적용할 것을 아니라

(2) 검토

- ① 특허기술 이외 법리는 신중해야 하리라. 특히 타당하다
- ② 단, 신기술·진보성 모두 구성요건 충족하는 바 차등을
두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존재한다

(3) 사항

신기술 위반이유로 권리범위 부정가능. 권해성 위반이유로
권해성 범위 부정 불가하다.

3 권리범위 주권 심판에서 권해성 상해판결가복

(1) 문제제기

허용하는 권리 주체와 침해하는 권리 주체가 있다

(2) 권해성

권해성 주권심판은 권리침해 목적으로 고유한 기능을 가
고 일체성. 권리범위 주권 심판에서 권해성 상해판결하면
대체로가 있어 권해성배원권이 발생하고 권리침해 기능약화
문제가 있으므로 권해성 상해판결 불가하다

(3) 검토

권해성배원권, 권리침해 기능약화 문제와 권리범위 주권심판
의 신기술 판결의 관련 목적 고려하면 권해성배원이 타당하다

(4) 402

권리상 위배를 권리단언이 불가하다 ✓

4 상표위원의 조치

(1) 선주상 분쟁의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확하면 권리범위가 속하지 않아 '인용상표'로
예상된다

(2) 권리상 분쟁의 경우

① 권리상 위배에 대해 권리단언 불가한 하에 같은 권리범위
분쟁을 상판서 볼 수 있다. ✓② 권리범위 다름으로 권리상 위배만 존재하는 경우, 각인의
이익이 있어 부정확 갖아준다 (부정) ✓③ 권리범위 타동은 다름으로 부정확하면 각인의 이익이 없고
X의 권리범위가 속하므로 '기각상표'로 예상된다

III 12문(3)

1 상표특허소송의 의미 / 취지 (186)

특허법원에 제정된 상표특허 소송을 의미

2 상표법위

(1) 문세정

소송과도 관계없이 '상표권리특의 (186⑥)'가 적용되는 소판
에서 제기된 주장에 상판권리가 문세정다 ✓

(2) 특허

① 무제한성 직권상고의. 변조취득을 논거로 한다

② 제2항 상고권리취득을 논거로 한다

(3) 사세

① 상고는 행정기관이고 상고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그 소장은 상고의 위법성 '원상'이라. 그러나 원판결은 심판에서 주장한바 새로운 사유 소장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원판결 무제한성 임명이다.

② 안. 항사과 직권 박탈라는 문제가 있을 경우 제2항 임명따름

(4) 제2

① 재판장은 권리는 위법위반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이므로(헌법 21조), 소장에서 여기서 '무제한성' 원판결이라

② 항사과 직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제2항' 따름다.

3 법원의 권리

무제한성 상고취소소송에서 항사과 직권 박탈문제에 관하여 제2항이 소장에서 새로운 주장 가능하다. 법원은 항사과 주장에 기해 판결한다 <판>

[문제-2]

10

I 문제

1 간접침해 의미/취미 (1개조)

직접침해 권침해이나 간접침해 제1항 높은 항위를 인정된
하 항위로 간주하는 제2항이다. 단, 간접침해는 특허
부상 손해 권리 양은 항로 매체만 인정된다(4대).

2 물건반영의 경우 (1개조1호)

2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을 증하는
항위를 인정다

3 권리범위 식인상판에서 간접침해 상지가복(적극)

(1) 항변

① 부당성 간접침해는 권리범위 안에서 침해간주하는 것이므로
권리범위와 무관하다

② 항변 침해간주하는 이상 - 권리범위에 속한다

(2) 항변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니라 대응제품은 식인상판 밖항으로
하여 간접침해는 권리범위 식인상판에서 상지한다(4대)

(3) 항변

권리범위 제1항의 물건도 객관적 특성이 가동하고 분할
해방 및 2기 3기의 권리범위 식인상판 3기상. 허용한다.

(4) 사안

간접침해로 소지한 권리범위 식인상판의 상지가한다



4. 권용성 요건

공용성라 권용성을 판촉해야 한다.

5. 공용성 판단

(1) 생각의 의미 (4대)

구성 및 특 고어인 용인들 구성 원배산 본배은 본배은 배은
의미라며 공공성 생각에 한하지 않고 가용.공공도 포함한다

(2) 구성부가 다른 우유인 효과 배회되는 경우 (4대)

구성부가 다른 우유 효과 배회되는 구성공공 생각에
영능이 된다

(3) 사안

$A+u+C$ 권마용 페르는 가공시 $A+u+b+C$ 가 되고
이는 甲의 $A+b+C$ 생각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6. 권용성 판단

(1) 타용성 판단 (4대)

사리공공성 승인권수 외는 공공성 공공성 타용성 타용성이
있는 것을 외는, 공공성 이관성, 판촉성, 사용가능성본은
타용성 된다

(2) 다른 용로 사용 가능성 (4대)

다른 방법으로 사용시 타용성이 외는, 권용성은 것을
배회된다.

(3) 사안

기존 이용공공과 다른방법으로 사용시 $A+u+C$ 는 배회된다

원래는 행태한 것을 배척한다. 가능성만을 떠올리게
 되고 실제 사항이 기술이용가능성으로만 사료로 원기
 때문이다

17 소관

2의 연가상 제르는 신종. 금융상 만족이후바 리용중이다

사안판결 4

h~t

II 사문(2)

1 직접침해 여부

(1) 구성요건 전체 충족 (부재)

구성요건과 2 해당관계가 2개의 실시방법이 존재하여
 원리 양자면 구성요건 전체 충족하지 못함

(2) 사안

① AER 회귀식 통계공식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② 단, 예외적으로 통계공식이 하나의 주제에 수렴되고
 위주에 기술내용이 명료하여 되고 그 기술내용이 주제에
 간접한 경우, 통계공식으로 통계공식 자체를 구성하는
 하다면, 예외적으로 주제상한 안으로 보라 (독려수용해)

③ 위 경우에는 작성행위로 보지 않음

2 간접침해 여부

(1) 간접침해 주지/제한 (부재)

① 간접침해 전제조건으로 작성행위에 개입성 높은 행위를 소위
 2번이 후에 간접침해 특정된 사항이 보지 하기 위험이다



② 단. 특허권 부당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 권한이다

(2) 121조 1조 생산 의미

특허권의 원배출 121조 1조의 생산은 국내생산을 의미
한다. 원배출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더라도 외국에서
원배출은 생산되었다면 간접침해 아니다

(3) 사안

제3국에서 J이 원제품 생산하다. 121조 1조의 생산이
아니라니 간접침해 아니다

2. 부당한 타당여부 (복합)

① 원제품으로 직접침해는 아니다.

② 국내생산 아니므로 간접침해도 아니다.

③ 부당한 복합'하

✓ 2.8

<중>

[문제-3]

I 문제(1)

1 문제집

공유권의 범용성이 문제권이다

2 함의

① 공유권 특허법 조항 근거로 한다

② 양유권 99 조항 취지는 근거로 한다

3 배제

99 조항은 무제한으로 특허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권 공유라는 것이 본래의 조항 취지를 형성하여 논제해야 한다는 보충 필요
이유를 본래의 조항의 취지를 본래의 조항에 대한 특허법 조항의 취지
주장 권은 특허법 조항에 본래의 조항에 대한 특허권 조항이 본래의
원칙상 공유 권은 조항 조항 조항 조항

4 검토

원칙 278 조가 소위권 이외의 조항에 대한 원칙상 공유 권은
한정 하므로 배제 타당하다

5 사전

특허권 공유의 범용성은 2.7 조항 조항 조항

II 문제(2)

1 소위권(1)



II 원문(2)

I 소문(1)

(1) 99②④ 의의 / 취의

1) 의의

특수인 경우, 지원이한 권리 소멸 하거나 사후권 소멸 시
문제의 중의 붙어야 한다

2) 취의 (사예)

특허권을 무효 개시권인바 타인의 공개행 등이 다른 공유가
각본에 공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특허권 소멸에
99②④와 같은 취의를 두는 것이다

(2) 분할권주인 인정여부 및 민법 269조 적용 여부

1) 분할권

특허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사예

① 공유나 사이에 이해관계가 인정되거나 특허법상 실시권
등은 개인적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성이 있다. ② 공유로 분할권주인 인정여부 특허법 상권규
이나,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③ 공유로 분할
권 인정한다

3) 결론

민법 269조 준용하되, 이는 인정여부 99②④의 취의
범위 안에서 법원 판단한다

4) 사2

특2 2사2로 분모평균화 후 얻어
민법 268조 적용가능하다.

2 순영문2)

① 현물변액 가부

1) 사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다. 현물변액 인정하면 사실상
현물처럼 처분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2) 사안

① 특허권 외의 현물변액은 불가하다

② 단, 현물은 분모평균화 있거나 분모없이 그 가액 현재
강조 유체가 있는 경우 '가액배당' 가능하다

(2) 정액배당 분액 가부 (정정)

1) 민법 269 조 준용

현물변액 인정하더라도. 현물분할시 그 가액 현재지 강조
유체가 있는 경우 정액배당 가능하

2) 특허법 122조

이 경우 다른 특허 '특허가 유체' 유체 있는 때 등
하 유체의 분할처리로 인정된다.

II 본문(3) - 소의문1)

1 무효상한 피권구인 자

(1) 139㉔

① 위시. 위와 무효는 피권구인으로 해야한다 ② 위반시
상정각하권

(2) 사오

2. 위 무효는 피권구인으로 해야한다. 위반시 상정각하
권

2 권거명위 각인상한 권구인 자

(1) 139㉔

① 위시. 위와 무효가 권구인이야한다 ② 위반시 상정
각하권

(2) 사오

2. 위 무효가 권구인이야 한다. 위반시 상정각하권

III 본문(3) - 소의문2)

1 상거/소/소 의의/위니 (186)

위임상 상거의 권거는 독어법원에 하는 것이다

2 원거명거 (186㉔)

상사자. 상사인, 상가기복원라만 원거명거이 된다

3 공주시. 원거명거

(1) 원거명



상당인에게 미치는 139조와 같은 범문의 규정이 원의
소송에서는 범문의 규정이 없이 존재한다.

(2) 조항

① 유사판무관 조항, ② 관할판무관 조항 등이 있다.

(3) 제11대

1) 제11대 - 유사판무관 조항

소유자 중 1인이 자기특수한 무리가 있거나 권리행사제한을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경우 특허권, 독점권을 무효로 하는 법원의
'불복명령'으로 모아 1인이 소제기 할 수 있다.

2) 조항

① 이 경우, 소유자들끼리 상호불복명령을 당면하다

② 1인의 소제기로 인종판무관 나 관할판무관 무리가 소제기
대상거리며, 1인의 소제기가 가압판무관을 야기 패소로
다른 소유자에게 피해가 된다

③ 무리가 해야 한다면 제11대 이배정치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4) 조항

소유자소송 제기를 불복명령으로 모아 1인의 권리행사가
된다.

(5) 소제

① 무리는 2 인종으로 ② 무리조항으로 원소제기가 된다.

<필>

[문제-4]

I. 문제 (1)

1. 문제 (1)

(1) 법령과 국외 (330)

법령 위반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법령과 국외
관련된다

(2)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이면 (310)

사적 재산권인바. 사적 재산권인바. 이면가능하다

(3) 국외인 국외 (330)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국외인 국외
임다

(4) 사적 - 유한성 증명

사적은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증명인바. 국외인 국외가 있다. 유한하다

2. 문제 (2)

(1) 법령과 국외

강제징역 원형 목적은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증명인바.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타당하다.

(2) 사적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증명인바.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3) 주지

- ①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권리사항은 불가하다 (37㉔).
- ② 채무대선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 할양할 수 있다.
- ③ 가압류할 수 있다.

II 실문(2)

1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가부 (37㉔)

사채채권인바. 아닌 가능하다.

2 이종 양로 보호

(1) 유전

사채자리 유전 양, 유효하다

(2) 예외

제2 양수인이 제1 양수인에게 양도 권능을 가진 배당행위에

각각가당하는 경우, 반사리로서 유효하여 무효다

3 출원 전 승계시, 제3자 예외요건

(1) 38㉔

출원이 제3자 대항요건이다

(2) '제3자' 의미 (4제)

제2 양수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정상 과태를

가진 사채 빚하고 중개자는 아니 해당자의 양도라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2) 사전

특정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제2항 제2항에 의함

4. 특허권 유상성

(1) 양도계약 효과 :

특허권 양도인은 관공리 이론으로 사실을 인정할 때 배임행위(이) 적극가담한 사실이 없이 양도계약 유효하다

(2) 특허권 효과

특정 특허권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관공리론의 무관사유가 없다. 유효하다

28

III 2. 문제(3)

1. 양도계약 효과 상실의 경우. 1. 특허권 침해 정도

(1) 관공리론의 적용 (330부문)

신정법제와 본은위에 의함. 승계인만 2. 관공리론의 적용이 없다

(2) 양도 계약 무효

1) X

특정 X 특허권 양도인이 아니다. 승계인 아닌 배임행위 아니어서 1. 관공리론의 무관사유가 없다

2) 4

특허 받은 후 있는 권리 양도 후 J의 특허로 권리인 명의 변경 신청이 되어 등록 발생했다 (384)

한 양도 계약이 무효라 되어. J의 특허권에는 384분을 무효사유가 없다

2 甲의 조치

(1) 특허권 이전청구 (99조의2)

① 384분을 위변의 경우 ^{X4의} 특허권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甲은 법원에 특허권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실정법상 384분 甲에게 특허권 등이 있는지 모르겠다.

(2) 광범한 배과 청구 (35)

① 384분을 위변의 무효상정 확정일로부터 30일내로 광범한 권리와 청구 가능하다. 이 경우 384분은 등록 인정한다 ② 무효상정청구, 384분은 상정청구 가능하다

(3) 384분의 주권 청구 (30)

J의 실정법으로 이미 384분바 (216), 384분바 청구해야 한다.

(4) 384분의 명의 변경 신청/청구

甲 384분이 위변의 경우 특허권에 신청. 甲 384분이 권리 양도 계약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384분이 청구한 청구 (불가)

양로대가 받았은 것이므로 불언라.

<글>

조지에게 good!

4

- 이하 여백 -

수고하셨습니다.
치과치료 감사합니다.

